

# “노인들 표 얻어 대통령 되더니 돈 없어 못주겠다? ... 이걸, 배신”

박근혜 복지공약 후퇴 ... 지역 정치권·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 경실련 박근혜 정부 신뢰 저하 향후 국정운영에 차질 전국 공동행동 진행할 것
- 정의당·진보당 노인들 실망 넘어 분노 예산부족 탓하지 말고 경제운용 기조 바꿔라
- 민주당 부자 감세 철회하면 재원 충분하데 거부·외면 원칙과 신뢰 정체 드러나

기초연금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대폭 조정·축소될 것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정치권 안팎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는 등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전국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보육·의료·기초생활보장 등 보편적인 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 아래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중앙정부가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라며 “특히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한 여야 정치권이 함께 약속하고 합의한 사안인데도 정부가 뒤늦게 지자체와 재정부담을 흥정하려는 것은 결국 재정논란을 일으켜 정책을 후퇴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보육,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줄줄이 후퇴할 경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져 향후 국정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상보육 정책 무력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의 진보 정당들도 일제히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장 장화동·강은미 공동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 노령연금 매월 20만원 지급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 노령연금 공약으로 당선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취임 6개월 만에 기초 노령연금 매월 20만원 지급을 폐기처분하

려고 해 기대를 걸었던 노인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천하지도 못한 공약을 남발해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는 선거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도 이날 “가장 핵심적인 공약을 실현 가능성도 없이 약속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산부족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부의 무능한 경제운용 기조를 바꾸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대선 때 공약을 해 어르신 표 얻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돈이 없어 못 주겠다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대단한 약속 위반



“해양주권 확립”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0주년 해양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청룡함 취역 신고를 받으며 거수경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다를 통해 국가 번영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해양주권의 확립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도서와 대륙붕,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EEZ) 주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도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국 순회투쟁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 의정부 신곡실버문화센터에서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어르신에 대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과 신뢰의 정치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됐다. 시장에서 물건값 깎듯 흥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기초 노령연금은 대통령의 의지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자 감세만 철회하면 어르신들께 연

금을 드릴 재원은 충분하데, 이를 거부·외면하는 박 대통령의 입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6일 ‘국회 3자 회담’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부자나 재벌들

을 쥐어짜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답변이었다”며 “그래 놓고 돈이 없다고 노인들만 우려먹었다. 표 얻자고 어르신들 상대로 거짓말해도 괜찮은가”라고 비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문체부 화해의 자리 될까

광주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강시장·유장관 회동 주목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법인과 문제 등으로 갈등을 보여온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부터 1박 2일 동안 광주에서 열리는 한국·중국·일본 문화장관 회의의 기간 동안 화해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문화전당 법인화를 강력히 반대해 온 강은태 시장이 최근 재정 확보 등을 조건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27~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각국 문화장관은 27일 오후 양 자회담을 연 뒤 빙고를 시민문화관에서 한·중·일 예술제를 관람한다. 28일에는 문화도시 선포식과 기자회견을 한 뒤 문화창의산업전을 둘러보고 광주시장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이틀간의 회의에서 강은태 광주시장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회의의 장소나 오찬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문화전당 법인화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강 시장과 유 장관의 만남에 대비해 중요 현안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공문서 위조사건으로 소원해진 양 기관의 관계 회복과 2015년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관련 예산 지원 및 조직 확대 논의,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운영 주체 협의 등

궁극궁극한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문광부가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당일 공문서 위조 사안을 언론에 확인해 주고 재정지원 불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강력 반발해 왔으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운영 주체를 예산 지원 조항도 없이 국가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정도 반대해 왔다.

강 시장과 유 장관은 지난 6일 광주에서 열린 제1회 한국·동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에서 만날 것으로 기대됐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여러 중요 현안으로 피어있는 만큼 양 수장이 만나 이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대비해 문화전당 법인화 문제 등 양 기관의 현안을 정리중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lucky@kwangju.co.kr

## 선거 전초전? ... 강은태·이용섭 전남대서 나란히 특강



강은태 시장 이용섭 의원

지방선거 광주시장 유력후보

전남대 행정대학원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차기 광주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두 사람을 초청, 광주의 현안과 비전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

다”고 밝혔다.

전남대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과정은 정치인·법조인·공무원·군인·언론인·기업인 등 지역의 각계 리더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10명(16기)이 과정을 수료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2013년 9월 26일부터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고객의 예금 등을 인출해가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본인확인 방법**

현재: 보안카드 + OTP

추가: 단말기지정 (PC, 스마트폰 등) 또는 추가인증 (휴대폰 문자, 전화 등)

전면시행 이후 개인고객이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①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 받거나 타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300만원 이상(일 누적 기준) 이체하는 경우
- \* 자세한 내용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사기 피해예방 유의사항**

1. 고객 정보(휴대폰, 집 전화, 사무실 전화 등)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2. 보안카드번호, 금융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피싱사이트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청 (☎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대출사기,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와 상담하세요